

# 이념 논쟁과 시장경제

글 최광 前 보건복지부 장관



최근 수년간의 보수·진보 이념 논쟁에 이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에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보수와 진보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들의 복합적 산물이다. 이념은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국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념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에게 체제적으로 진화해온 보수와 진보의 역사적 경험이 없다.

근래의 이념 논쟁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관찰된다. 첫째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보, 보수란 말을 많이 들긴 하나 보수와 진보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자신의 이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이념에 배치되는 정책을 아무렇지 않게 제시한다. 셋째 이념에 중도가 있다고 믿는 이른바 중도 통합논리가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과연 이념에 중도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념 논쟁에서 혼란이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점이다. 일관성 있는 원리에 바탕을 두지 않거나 본질이 왜곡된 주장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 라는 본질이 아닌 말장난이 힘을 얻고 있다. ‘합리적’ 이고 ‘개혁적’ 인 것이 어느 특정 이념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데도 마치 그런 양 오도되고 있다. 보수도 진보도 모두 개혁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도대체 보수와 진보가 무엇인가? 보수의 사전적 정의는 ‘재래의 풍속 습관과 전통 제도 등을 중요시하여 그대로 지키다’ 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진보 좌파들은 보수를 ‘수구 꼰통’ 이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퇴보의 반대로 진보를 이해하다 보니 보수보다 진보를 좋아하고 그 편을 든다.

더 정확히 정의하면 보수 또는 우파는 ‘개인’ 을 모든 일의 중심에 두는 자유주의 사상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가치 체계이다. 진보 또는 좌파는 ‘집단’ 과 ‘공동체’ 를 강조해 정치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체제,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지시(계획)경제체제를 신봉한다. 경제 체제에 대한 보수주의는 시장 원리를 존중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가급적 자제하는 이념을 말하며, 진보주의란 시장 경제의 결합과 모순을 지적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적극 강조하는 사상을 말한다.

정치가 공인이기에 자신의 이념을 분명히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온갖 경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보수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것은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평등과 분배적 시혜 정책을 강조하는 진보주의자가 시장경제의 신봉자라고 외치는 것은 모순의 극치다.

진보주의 또는 좌파 그리고 보수주의 또는 우파는 하나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으로서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 어느 것이 더하고 덜하다고 할 수 없다. 종교에서 어느 특정인이 불교 신자가 되기도 하고 기독교 신자가 되기도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보수와 진보 간의 논쟁에 싫증이 난 사람들과 각 진영의 일부 논객들이 이념 논쟁에서 중도를 표방하고 있다. ‘공동체 자유주의’ 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념에는 절대 중도가 없다. 이는 한 개인이 여러 종교를 동시에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만약 한 사람이 기독교와 불교를 동시에 믿는 경우 그는 사이비이고 양쪽에서 동시에 배척받을 것이다. 좌파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제도는 원시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무질서하고 반사회적이며 불공평하고 근본적으로 비도덕적이라 비난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은 틀리거나 근거가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야말로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제도이고 오늘날 인류가 이나마 풍요롭게 사는 것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덕분이다.

시장경제를 빈부 격차의 주범으로 믿게 된 것은 이 체제만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불평등을 사회주의 때문이라고 비난한다면 심중팔구 수용소에 잡혀갈 것이다. 비판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만 불평등을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는 불평등하다는 고정관념이 생긴 것이다. ☺

#### 약력

- 한국 조세연구원 원장
- 국회 예산정책처 처장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